

# 일본 시민단체들 “아베, 긴급사태 발미 개헌 용납 못 해”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발미로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밝힌 아베 신조 총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아베 정권 규탄 집회를 갖고 '긴급사태 선언에 이의 있고, 개헌 이용 터무니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헌법을 구하는 여성 네트워크', '시민헌법조사회'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 그동안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책이 낙후한 것은 정치적 이유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중일 정상회담 및 도쿄올림픽 준비 등으로 감염증 대책이 대폭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사를 고의로 축소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은폐한 채, 공연히 ‘위기 협박’을 하고, 긴급사태 선언에 협조를 강요하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게다가 이 시기에 긴급사태 대책을 발미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개헌 책동을 하는 아베 총리의 개

헌 추진 발언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아베 정권의 책임을 규탄하며 아베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 긴급사태 선포를 보고하면서 긴급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무겁고 중요한 과제”라며 “감염증 대응도 근거로 하면서 국회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여야의 틀을 초월한 활발한 (개헌)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포함된 긴급사태 조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2018년 3월 내놓은 개헌안에는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내각이 법률과 사실상 비슷한 효력을 가진 '정령' (政令)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태 조항이 포함돼 있다.

# 이라크, 두 달 새 총리만 세 번째 지명

이라크의 신임 총리로 무스타파 알카드히미(53) 현 국가정보원(NIS) 원장이 지명됐다. 이라크의 신임 총리가 임명된 것은 최근 두 달 새 이번이 세 번째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카드히미 지명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영광스럽게도 이라크의 새 내각을 구성하는 고귀한 임무를 받았다. 이라크 국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겠다.”라며 지명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아델 압둘-마흐디 총리가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고서 2월 1일 무함마드 타우피크 알라위 전 장관이 총리로 지명됐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대가 알라위 지명자를 반대해 그가 구성한 내각이 이라크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지명 한 달 만에 사퇴했다.

이에 바흐람 살리 이라크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아드난 알주르피 의원을 새 총리로 지명했으나 또다시 내각 구성이 실패하면서 9일 오전 사퇴했다. 알주르피 지명자는 친이란 정파가 친미 성향이라는 이유로 내각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시아파 출신인 알카드히미 새 총리 지명자는 사담 후세인 통치 시절 정치적 탄압을 피해 유럽에 체류해 반정부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2003년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자 귀국해 국영 언론사 출범, 인권 보호 단체에 일조했다. 2016년 6월 당시 하 이데르 알아바디 총리는 그를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했다.

의원내각제인 이라크는 의회에서 추천한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현재 이라크 의회 구성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정파가 없는 탓에 연정을 이뤄야 한다.

이라크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국가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원유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안팎으로 곤경에 처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 정치권에서도 총리가 사실상 3달 넘게 공석이 되면서 정부의 지도력이 와해하는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 탄자니아 대통령, 코로나 위기 속 집단 예배 장려

탄자니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집단 예배를 장려하고 나섰다.

9일 '국민일보'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존 마구풀리 대통령은 신도의 몸속에선 코로나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다며 예배 참석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신의 중재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사악한 바이러스'를 평정하기 위해 교회와 모스크에서 기도할 것을 장려했다. 실제로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 북부 도시 아루샤 등지 교회와 모스크에선 예배를 보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WSJ는 전했다.

이 때제는 또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자국민에게 예배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하

는 정부는 탄자니아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마구풀리 대통령은 지난달 말 "코로나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살 수 없고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탄자니아와 달리 다른 아프리카 국가는 교회, 모스크 등 집단 예배 시설에 대해서 폐쇄하는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다. 가나,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복음주의 전도사들을 체포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탄자니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열외자'가 돼가고 있다. 인구 5,700만의 탄자니아에서 이뤄진 코로나19 검사는 273건에 불과하고 확진자는 24명이다. 3개 국제공항도 운영 중이며 국경 폐쇄와 같은 정책 역시 취하지 않았다. 교회와 상가 등 일상과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www.suhl.com  
info@suhl.com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